

IDP 정책연구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R&D, HRD, 컨설팅을 중심으로 -



IDP 정책연구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R&D, HRD, 컨설팅을 중심으로 -



요약

진보개혁진영이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문제로 어젠다를 선점하였다. 민주당 반민주의 틀에서 경제사회문제에서의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한걸음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는 복지문제 외에도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있다.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문제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의해 가계의 비용이 절감되고 복지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최대 관심사는 내 일자리가 안정적인가와 내 자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일자리문제의 핵심은 민간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일 자리를 늘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에서 클리닉형 수업을 통해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것과, 대학교육에서 중위권대학을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집중투자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경제사회 부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일자리문제와 교육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88%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15조나 되는 R&D예산을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에서 R&D와 HRD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체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서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외부 연구단체·연구자와 공동 연구 작업 또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로젝트를 「정책연구」로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이동호 수석연구위원이 수정·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R&D, HRD, 컨설팅을 중심으로 -



Contents

- I. 서론 1
- II. 중소기업과 R&D 3
 - 1. R&D예산 현황3
 - 2. R&D예산의 중소기업 집중지원 필요성..... 10
 - 3.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 14
 - 4. R&D예산의 HRD예산으로의 전환 18
- III. 중소기업과 HRD 21
 - 1. 정부 HRD예산 현황 21
 - 2. HRD 현황 24
 - 3. 중소기업 HRD 활성화를 위한 방안 25
- IV. 중소기업과 컨설팅 28
 - 1.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현황 28
 - 2. 일본의 성공사례 30
 - 3. 중소기업 컨설팅의 확대방안 31
- V. 결론 34

• 표 목차 •

- [표 1] 부처별 R&D예산 사업 내역(2010)4
- [표 2]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20개 기업7
- [표 3]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20개 대학8
- [표 4] 연도별 R&D투자세액공제액 12
- [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 13
- [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 비중 13
- [표 7]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비와 교육훈련 투자비 비율 19
- [표 8] 직업능력개발 예산 세부 내역 22
- [표 9] 컨설팅사업 과제별 지원내역 29

• 그림 목차 •

- [그림 1]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추이3
- [그림 2] R&D예산의 기능별 분포 (2011).....4
- [그림 3]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 국제비교(2010)..... 18
- [그림 4] 우리나라 정부 HRD 예산 추이 21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I. 서론

-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문제와 교육문제임. 중소기업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핵심임
 - 대기업 정규직과 전문직, 공무원 등 10% 이내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직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여겨지고 있음
 - 온 국민이 앓고 있는 교육문제도 90%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됨. 중소기업 쪽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어서 경쟁이 분산되지 않는 한, 사교육비 부담 등 교육문제와 저출산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
 -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임.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고 사회통합도 불가능함.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양극화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근로자의 88%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함
-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크고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어왔지만, 결과가 말해주

듯 그 실효성은 매우 부족했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즉,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금융지원 등 일시적인 미봉책 위주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임

- 중소기업 문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부터 시작하여,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이 있으면 대기업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기 때문임

-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용자를 얻고, 산업공단의 저렴한 토지를 제공받으며,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규제를 없애고, 저임금의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며, 자식에게 상속세 없이 기업을 물려주는 것에서 기업의 활로를 찾으려 했음

- 하지만, 더 이상 저렴한 토지와 풍부한 자금, 저임금의 노동에서는 경쟁력과 생산성이 나오지 않음. 또한 값싼 토지제공과 토지이용규제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땅값차익의 이득을 줄 뿐,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지 않음.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것은, 88%의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중소기업 사장의 이윤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님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를 분명하게 맞추어야 하며, 이것은 요소생산성, 즉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지금의 경제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도 함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는, R&D(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와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가 있음. R&D는 중소기업 연구 인력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HRD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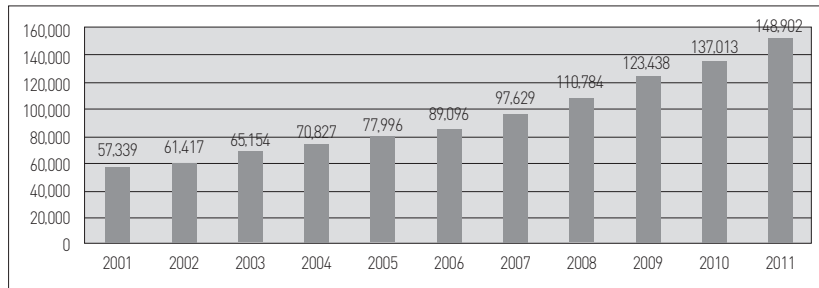
II. 중소기업과 R&D

1. R&D예산 현황

- 국가 R&D 예산은 2001년 5조 7,339억 원에서 2011년 14조 8,902억 원으로 연평균 10.0%씩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그림 1〉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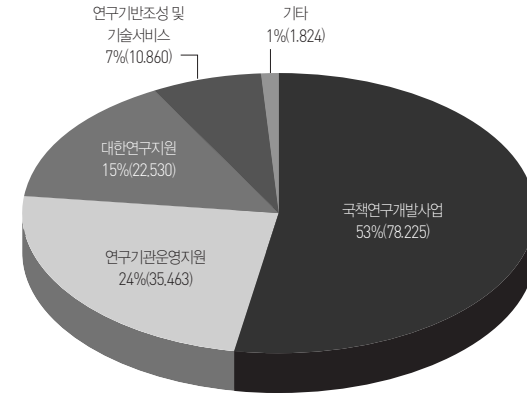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른 정부 R&D 예산의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 R&D예산의 기능별 분포 (2011)



- 국책연구개발사업이 52.5%(7조 8,225억 원)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기관운영지원이 23.8%(3조 5,463억 원), 대학연구지원 15.1%(2조 2,530억 원),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7.3%(1조 860억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 부처의 R&D예산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부처별 R&D예산 사업 내역(2010)

부처명	사업명	'10년예산 (억원)	주요내용
지식경제부	•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8,652	산업 에너지 IT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장기 과제 지원
	- 산업기술원천기술개발	6,606	그린카 등 수송,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기반, 지식서비스, USN 등 전략분야 투자
	-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	5,769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SW, 전자정보, 다바이 등 IT 분야 투자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6,277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전력·원자력 분야 집중지원

지식 경제부	• 부품소재경쟁력강화사업	3,597	핵심부품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	5,822	산업기술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고유사업비, 건설비 지원 등
	• 광역, 지역발전 기술개발	5,985	지역전략, 특화산업 지원 및 광역경제권 사업 등 광특회계
	• 기술이전사업화	476	민간 및 공공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는 사업
	• 국제산업기술협력	471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연구 지원사업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744	고부가가치산업 및 미래산업을 선도할 R&D 고급인력과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
	• 디자인기술력향상	253	디자인개발 지원 및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헬기기술지립화	424	한국형헬기의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축적을 통해 헬기 독자개발 역량 확보
	• 산업기술고도화	674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지원 및 중소기업의 단기 핵심기술개발 추진
교육 과학 기술부	• 개인연구지원사업	6,500	풀뿌리 기초과학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 일반연구자 지원(3,980억원), 리더연구자지원(530억원), 중견연구자 지원(2,990억원)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044	21세기 우주선진국 진입을 위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및 위성체 개발, 우주분야 기초 원천핵심기술개발사업
	•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1,052	중요 전략기술 분야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 미래기반 기술개발사업	1,503	바이오, 나노 및 첨단융합분야의 기술개발과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연구개발
	• 교과부 직할기관 출연	5,241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출연
	• 기초기술 출연(연) 지원	8,266	기초기술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고유사업비, 건설비 지원 등
	•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	711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 구축, 도시철도시설 표준화 등
국토 해양부	•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개발	375	해양에너지 실용화, 해양광물개발 및 수자원 이용기술개발사업

국토 해양부	• 해양환경기술개발	225	해양환경 5대 기술개발(오염제어, 생태계복원, 환경위해성평가기술, 해양환경감시, 기후변화대응해양기술개발)	
	• 항공선진화기술개발	380	클린경량항공기 인증기 개발,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차세대 항행시스템 개발 등 추진	
	• 첨단도시개발	792	유비쿼터스 기반 첨단복합 공간창출 및 도시 구조재생을 위한 핵심전략사업	
중소 기업청	•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4,510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2,797	신성장동력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성장 유망기술 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750	기술개발 후 판로가 연계된 상용화기술개발	
	- 첨단연구장비 활용	327	친환경 생산공정 및 저탄소 설비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097	자체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간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보건 복지 가족부	• 보건의료기술개발	1,281	의약품, 의료가기 등 보건의료분야의 R&D사업
		• 면역백신기술개발	150	백신의 자체개발을 통한 독립적 국가보전체계 구축(신종플루, 조류독감 대응)
• 한의약선도기술개발		68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환경부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1,003	환경오염문제 해결,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기술개발(주로 사후처리기술)	
	• 토양지하수오염 방지기술개발	121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등 국내 토양, 지하수 환경기술의 국산화 기술개발	

- 지정부 사업 중에서는 첨단기술과 관련 있는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과 '산업기술 출연(연) 지원'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교과부의 사업 또한 '우주핵심기술'과 '21C 프론티어(중장기 원천기술)', '미래기반기술' 등으로 모두 대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토해양부 사업 또한 ‘미래도시 철도기술’과 ‘첨단도시개발’, ‘교통체계효율화’, ‘항공선진화기술’ 등 대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대부분이며, 환경부의 사업도 ‘차세대핵심환경기술’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음
- 중소기업청의 사업인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4,510억 원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1,097억 원만이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음
- 연구개발예산 배정 기업부문 상위 20개 기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20개 기업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1	한국항공우주산업(주)	259,726
2	(주)한화	125,360
3	삼성SDS	84,579
4	LIG넥스원(주)	51,404
5	현대자동차(주)	47,643
6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45,088
7	한국토지주택공사	32,746
8	삼성전자(주)	32,255
9	한국수력원자력(주)	29,576
10	두산중공업(주)	27,728
11	삼성테크윈(주)	25,804
12	두산인프라코어(주)	22,115
13	현대로템(주)	20,958
14	(주)효성	18,065
15	LG전자(주)	16,233
16	현대모비스(주)	15,721
17	한국도로공사	15,540

18	삼성탈레스(주)	15,484
19	LG이노텍(주)	11,918
20	(주)도담시스템스	11,348

*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0.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 이 중 20위의 (주)도담시스템스를 제외한 19개 기업은 모두 대기업임. 불과 20개 기업이 사용하는 R&D예산이 9,092억원으로 기업 배정예산 2조 8,185억원 중 32.2%나 차지하여 혜택의 집중이 지나침
- 연구개발예산 배정 대학부문 상위 20개 대학은 다음과 같음

〈표 3〉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20개 대학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서울대학교	271,486	9.0
2	한국과학기술원	142,029	4.7
3	연세대학교	126,178	4.2
4	포항공과대학교	114,549	3.8
5	고려대학교	95,196	3.2
6	광주과학기술원	81,265	2.7
7	한양대학교	80,232	2.7
8	성균관대학교	70,991	2.4
9	경북대학교	65,039	2.2
10	인하대학교	64,310	2.1
11	부산대학교	60,430	2.0
12	전남대학교	55,883	1.9
13	전북대학교	52,500	1.7
14	경희대학교	45,386	1.5
15	이화여자대학교	43,555	1.4

16	건국대학교	39,376	1.3
17	충남대학교	37,367	1.2
18	경상대학교	34,498	1.1
19	서울대학교병원	33,599	1.1
20	충북대학교	33,583	1.1

* 위와 상동
 * 비중은 대학 수행 연구비 3조 120억원 대비 비중임
 *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의 기관출연금은 제외됨

- 대학들 중 상위 10개 대학이 대학 수행 연구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대학 324개 중 3%에 해당하는 대학이 39.1%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지나친 집중이라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10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이 중 2위에 해당하는 연세대학교의 적립금은 4577억 원이고, 5위에 해당하는 고려대의 적립금은 2430억 원으로서 자금이 풍부한 대학들임. 위 사립대학 중 포항공대는 포항제철이, 성균관대학교는 삼성그룹이, 인하대학교는 한진그룹이 대학을 소유하고 있음. 이 대학들에 대한 R&D예산 배정은 그대로 해당 대기업의 R&D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010년 기준 1조 8,587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전용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R&D예산은 2010년 기준 5,607억원으로서 전체 R&D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배정된 1조 8,587억원 중 중소기업 전용예산인 5,607억원을 공제한 1조 2,980억원은 정부기관에서 부처에 할당된 R&D예산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배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예산임

- KOSBIR제도에 의해 시행기관별 지원 권고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부분 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후에 통보되어 실질적 참여가 미흡함
- 중소기업 R&D사업의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대기업 R&D인데 겉만 중소기업 몫으로 포장되고 있음.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만 연구는 중소기업이 거의 하고 특허권은 대기업이 갖기도 함

2. R&D예산의 중소기업 집중지원 필요성

- 근로자의 88%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필요함
- 그동안 대기업 집중지원의 그늘이 너무 커서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에서는 자금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자체노력만으로는 연구개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음.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정부의 R&D예산 지원이 없이는 R&D투자의 증액이 어려움. 정부의 예산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비로소 R&D투자가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R&D 투자를 늘릴 수 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매우 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기업 생산성 제고효과

분석과 주요 시사점(2011)'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요소생산성 기여율은 중소기업이 0.92%이고 대기업이 0.14%로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2001)-제조업'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총매출액 중 기술혁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매출기여도 20% 이상, 대기업 중 21.4%, 중소기업 중 39.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신범철, 이의영 교수의 'R&D투자와 수출의 생산효율성 제고 효과(2010)'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R&D투자가 실패하면 시장에서 바로 퇴출되지만 대기업은 R&D투자가 실패해도 퇴출비용이 커서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서 R&D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업 R&D의 양극화 현황진단과 정책과제(2006)'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4년 사이 9년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스톡의 탄력도는 0.016으로 대기업의 탄력도 0.012보다 높게 나타남
- 산업연구원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부 R&D지원 효과 비교(2008)'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효과가 1% 유의수준에서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R&D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부담 R&D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 R&D지원의 추정계수가 10% 유의수준에서도 '1'과 다르지 않게 나타나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은 대기업 자체부담 R&D활동을 구축(crowding-out)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은 R&D투자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충분함
-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을 통해서 R&D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

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3D기술·녹색기술·차세대 LCD기술·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대기업들의 첨단기술 관련 R&D 투자 공제율을 3~6%에서 20%로 대폭 늘려준 대기업 특혜임

- 이로 인해 R&D투자 세액공제액은 2010년 1조 8천억원에서 2011년에 2조 8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그 증가분 1조원의 혜택은 고스란히 대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다

〈표 4〉 연도별 R&D투자세액공제액

(단위: 억원)

연도	R&D투자세액공제총액
1998	1,999
1999	2,520
2000	3,787
2001	4,717
2002	7,234
2003	9,094
2004	9,356
2005	4,914
2006	9,003
2007	14,037
2008	15,271
2009	15,447
2010	18,597
2011	28,161 (잠정)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도 무방함

〈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

(단위: 억원)

	계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2002	46,984	4,572	19,450	10,609	1,463	6,126	-	4,764
2003	49,036	4,281	21,135	11,141	1,631	6,514	-	4,334
2004	59,847	4,059	26,001	13,233	2,459	7,576	-	6,518
2005	77,904	4,408	34,081	18,273	3,914	8,285	-	8,944
2006	87,639	5,649	39,094	19,014	5,803	9,250	2,520	6,309
2007	95,745	5,452	40,628	21,978	5,923	10,148	4,608	7,008
2008	109,936	6,225	45,526	26,555	9,627	11,787	2,603	7,613
2009	124,145	6,683	49,718	30,120	13,183	15,002	1,007	8,433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 비중

(단위: %)

	계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2002	100.0%	9.7%	41.4%	22.6%	3.1%	13.0%	-	10.1%
2003	100.0%	8.7%	43.1%	22.7%	3.3%	13.3%	-	8.8%
2004	100.0%	6.8%	43.4%	22.1%	4.1%	12.7%	-	10.9%
2005	100.0%	5.7%	43.7%	23.5%	5.0%	10.6%	-	11.5%
2006	100.0%	6.4%	44.6%	21.7%	6.6%	10.6%	2.9%	7.2%
2007	100.0%	5.7%	42.4%	23.0%	6.2%	10.6%	4.8%	7.3%
2008	100.0%	5.7%	41.4%	24.2%	8.8%	10.7%	2.4%	6.9%
2009	100.0%	5.4%	40.0%	24.3%	10.6%	12.1%	0.8%	6.8%

- 대기업들은 2002년만 하여도 정부로부터 1,463억원의 R&D지원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무려 1조 3,183억원이나 지원을 받아서 불과 7년 만에

지원예산이 10배나 늘었음. 반면 중소기업들은 2002년에 6,126억원의 R&D지원을 받던 것이 2009년에 1조 5,002억원으로 늘어서 2.5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음

-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중은 2002년의 13.0%에서 2009년 12.1%로 오히려 0.9% 줄은 데 비해, 대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중은 2002년의 3.1%에서 2009년 10.6%로 무려 7.5%p나 늘어났음

- 대기업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충분한 R&D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R&D역량을 축적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음. 따라서 정부의 R&D 예산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함

“수조원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그들의 자금으로 R&D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R&D 자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집중토록 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스피드아이언츠를 많이 탄생시키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현명한 정책이 될 것이다”.
(경북대학교 최용호 명예교수)

3.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중소기업은 내부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의 연구기관, 연구공동체 등으로부터 R&D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외부의 R&D성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흡수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
- R&D예산 중 약 70%정도가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집행됨. 그런데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R&D프로젝트의 주제가 중소기업이 활

용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조차 중소기업의 내부화역량 미비로 인해 활용하기 어렵게 되면 R&D예산의 70%에 해당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R&D예산의 수혜자는 대기업으로 귀결됨

- 중소기업은 자체 R&D역량이 취약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 하에 연구개발이 가능함. 산학연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중소기업의 연구수요를 대학과 연구소가 정확히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공동연구기획이나 연구기획컨설팅, 연구인력 파견 등이 필요함

(1) 연구기획 컨설팅

- 대학과 연구소는 중소기업과 R&D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공동 연구기획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에서는 연구 인력이 부족함. 그 중에서도 석박사급의 고급 연구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함.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지원사업간의 연계부족도 중소기업 기술인력부족의 한 이유임
 - 기존의 '연구자금 일부지원' 방식을 혁신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전문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연계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연구기획'은 대학과 연구소가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기획 컨설팅'을 하는 것을 포함함. 연구기획 컨설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외부컨설팅회사가 함께 할 수도 있음
- '연구기획'은 '연구프로젝트' 공모와 별도로 작은 연구과제 혹은 컨설팅 사

업으로서 시행함. 공동연구기획의 결과물로서 공동연구 프로젝트 주제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연구과제로 공모하여 심사결과 채택되면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함

(2) 연구인력 파견

- 연구기획과 공동연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도 시행하도록 함
 - 출연연 및 대학의 연구 인력이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임
 - 1단계로 박사급 연구책임자 전문인력을 전문분야별,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연구회 등 전문기관이 주관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석박사급 서포터즈 DB 및 전문인력 인터넷 포털을 구축함
 - 2단계로 기술혁신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포털'에 접속해 기업이 있는 지역별, 전문분야별 기술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검색해 기술자문 및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함
 - 위 과정을 통하여 박사급 전문인력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진단하고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함. 이를 토대로 R&D를 포함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함. 그리고 연구개발, 시험평가, 표준화, 수출지원 등 제시된 방안에 맞춰 적절한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정책과 R&D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경쟁력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수요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연구책임자는 좀 더 현실적인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식경제부는 2010년부터 연 100억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출연연구소 소속으로 채용하여 기업과 출연연이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기업에 3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상자들이 중견기업(300~999인의 대기업) 근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대기업 특혜가 될 소지도 있음. 또한 기업에서 채용하여 3년 뒤 출연연으로 가는 방식이어서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중소기업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에서 실무수습을 한 성과를 출연연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싱가포르의 T-UP프로그램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산하 연구기관의 고급연구 인력을 최장 2년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정부는 파견연구원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에서도 석박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인턴연구원 고용보조금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는데, 이 사업의 대상기업을 확대할 뿐 아니라, 연구인력 파견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지경부의 '기술인재 지원사업'은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출연연의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100억원에 200명 파견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3) 기술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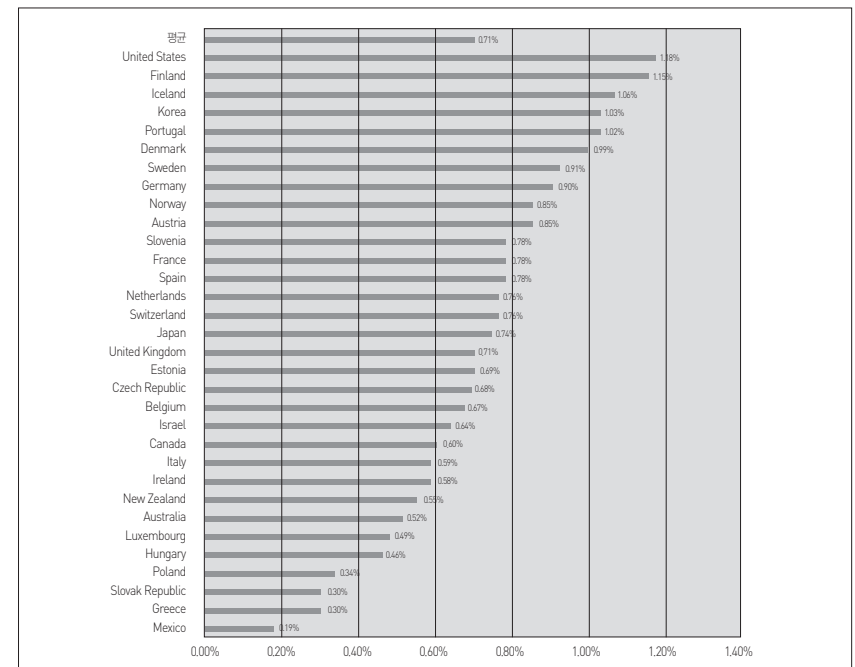
- 산학연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되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투자 방향설정 및 과제발굴 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수요조사와 기술예측을 실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4. R&D예산의 HRD예산으로의 전환

- 우리나라는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이 높은 나라임

〈그림 3〉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 국제비교(2010)



주 : OECD 34 회원국 중 자료가 없는 칠레, 터키를 제외한 32개국 자료 / 출처 : OECD

- 그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비(직업훈련 재정투자)는 OECD 국가 26개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표 7〉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비와 교육훈련 투자비 비율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비 비율			GDP 대비 교육훈련 투자비 비율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호주	0.38%	0.34%	0.32%	0.01%	0.01%	0.01%
오스트리아	0.63%	0.71%	0.68%	0.33%	0.40%	0.37%
벨기에	1.19%	1.22%	1.30%	0.20%	0.18%	0.18%
캐나다	0.32%	0.30%	0.29%	0.08%	0.08%	0.08%
체코	0.25%	0.26%	0.25%	0.01%	0.01%	0.01%
덴마크	1.58%	1.52%	1.31%	0.50%	0.43%	0.33%
핀란드	0.89%	0.89%	0.86%	0.37%	0.37%	0.37%
프랑스	0.89%	0.92%	0.92%	0.29%	0.29%	0.27%
독일	0.88%	0.85%	0.77%	0.25%	0.31%	0.28%
헝가리	0.30%	0.28%	0.29%	0.04%	0.06%	0.06%
아일랜드	0.63%	0.61%	0.62%	0.24%	0.24%	0.25%
이탈리아	0.57%	0.50%	0.46%	0.20%	0.18%	0.18%
일본	0.25%	0.19%	0.16%	0.04%	0.04%	0.03%
한국	0.13%	0.13%	0.14%	0.04%	0.05%	0.06%
룩셈부르크	0.50%	0.48%	0.48%	0.12%	0.12%	0.10%
네덜란드	1.30%	1.19%	1.09%	0.13%	0.11%	0.10%
뉴질랜드	0.39%	0.38%	0.35%	0.18%	0.18%	0.16%
노르웨이	0.74%	0.58%	0.56%	0.37%	0.26%	0.23%
폴란드	0.42%	0.45%	0.50%	0.10%	0.10%	0.10%
포르투갈	0.69%	0.61%	0.53%	0.29%	0.26%	0.20%
슬로바키아	0.34%	0.32%	0.22%	0.02%	0.01%	0.00%
스페인	0.78%	0.80%	0.80%	0.17%	0.16%	0.15%
스웨덴	1.29%	1.36%	1.12%	0.33%	0.33%	0.20%
스위스	0.75%	0.67%	0.60%	0.28%	0.23%	0.19%
영국	0.44%	0.33%	0.32%	0.03%	0.02%	0.02%

미국	0.13%	0.13%	0.13%	0.05%	0.05%	0.04%
26개국 평균	0.64%	0.62%	0.58%	0.18%	0.17%	0.15%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09)

- R&D와 HRD의 균형을 위해 R&D예산의 일부를 HRD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함
 - 지식경제에 대해 시장적 접근을 하는 나라에서는 연구개발 중심 축적체제가 성립하여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지식경제에 대한 협력적 접근을 하는 나라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중심 축적체제가 성립하여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R&D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HRD비중은 너무 낮아서 소득역진성이 심각하고, 그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음
 -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R&D예산의 혜택을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소기업의 R&D예산 활용도를 단기간 내에 올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R&D예산의 일부를 HRD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R&D예산을 동결하고, R&D예산의 증가예상분을 HRD예산 증가분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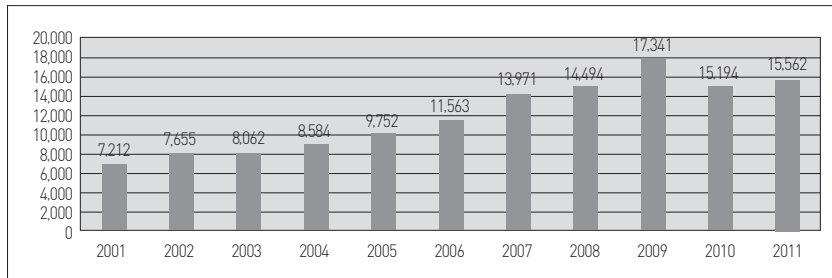
Ⅲ. 중소기업과 HRD

1. 정부 HRD 예산 현황

- 정부 HRD 예산은 2001년 7,212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에 17,341억원이 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2011년 1조 5,562억원이 되었음

〈그림 4〉 우리나라 정부 HRD 예산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직업능력개발예산의 세부 내역과 그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8〉 직업능력개발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합계	14,495	17,370	15,194	15,562
일반회계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새터민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 자활직업훈련)	474	962	838	723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운영비지원, 정보화)	707	620	656	773
	한국폴리텍대학출연 (운영비지원, 정보화)	1,282	1,780	1,376	1,216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136	196	220	252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70	70	0	0
	국가기술자격인프라확충	10	10	0	0
	소 계	2,679	3,638	3,090	2,964
특별회계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13	9	9	9
	제주직업능력개발	14	18	3	3
	소 계	27	27	12	12
고용 보험 기금	사업자능력개발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	3,977	4,483	4,106	4,247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학자금지원)	2,313	3,294	2,872	2,380
	기타능력개발지원 (노사협력직업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기관및과정평가)	169	71	63	54

고용 보험 기금	국가전략직종훈련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지원,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상업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1,494	1,255	998	1,495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중소기업직무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유급휴가대체인력지원,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	941	1,405	1,175	1,458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직업능력개발지원인프라구축, 기능진흥사업)	371	330	337	363
	한국폴리텍대학위탁훈련 (기술기능인력양성, 능력개발훈련지원 신기술시설·장비확충)	1,176	1,091	1,049	99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위탁훈련 (직업훈련교원양성, 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연수, 직업훈련교구재개발, 직업능력개발노후장비교체, 능력개발교육시설확충지원)	334	301	278	279
	능력개발용자지원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 대부,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961	1,341	1,147	1,270
	기술자격검정지원금	25	11	0	0
	소 계	11,761	13,582	12,025	12,537
	기타	직업능력개발원 운영비	28	36	29
근로자복지 진흥기금	신규실업자등훈련생계비 대부	0	87	38	2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2010)와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HRD 현황

(1) 직업능력개발 평생학습의 현황

- 우리나라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의 73% 수준이나, 평생교육이 취미활동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작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의 36.8% 수준밖에 되지 않음.(우리나라 평균은 10.5%, OECD 평균은 28.5%) 그런데 실업자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7.4%로 OECD 평균 15.8%의 110.1% 수준으로서, 과도하게 실업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들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② 대학은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외면하고 있고, 직업관련 교육기관에서도 적합한 단기 향상과정 운용이 부족하며, ③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쪽에 주로 관심이 있어서 교과부 예산의 대부분이 초중등교육 및 연구중심 대학교육에 투자되고 평생·직업교육에는 과소투자하고 있고, 노동부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업자훈련과 기능자양성에 주로 관심이 있으나 재직 근로자 직무훈련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기 때문임

(2) 중소기업의 HRD 실태

- 중소기업의 HRD 참여율은 대기업의 HRD 참여율에 비해서 매우 낮음

- 1000인 이상의 기업에서의 훈련참여율이 148.4%에 이르는 반면, 50인 미만의 기업에서의 훈련참여율은 18.7%, 50~100인의 기업에서 39.6%에 불과함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임

- 기업을 통한 훈련지원으로 시장실패(취약계층)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이 이루어졌음

-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의 훈련참여 애로요인(시간, 돈, 마땅한 교육훈련과정 부족 등) 해소 없이는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직무훈련을 사내프로그램이나 사설학원에서 받고 있지만 훈련만족도가 낮고, 공공훈련기관이나 대학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사내훈련(38.1%), 사업체 부설(15.8), 학원(13.0%)에서 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산업교육전문기관(19.2%), 대학부설(17.3%), 공공직업전문학교(15.6%)임

3. 중소기업 HRD 활성화를 위한 방안

• HRD예산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대학이 긴밀한 연계 속에서 HRD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대학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함

- 노동부에서 전액출자해서 만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서 전액 출자해서 만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모델을 확산함
- 위 두 대학은 제조업종의 중간수준 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나아가 서비스업종과 실무수준, 고급수준의 인력개발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

• 전문대학과 폴리텍은 2년제, 일반대학은 4년제의 구분은 매우 형식적이고 경직적이며, 직업능력개발을 아카데미즘의 하위에 두는 매우 잘못된 발상임. 직업능력이나 아카데미즘이나 모두 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개발과정·석박사 과정으로 유연하게 열려있어야 함

- 현재의 전문대학을 4년제로 하게 되면 대학공급이 초과되고, 그렇다고 직업중심대학에서 전문대학을 배제하는 것 또한 부적절함. 따라서 2년제의 전문대학과 4년제의 일반대학이 연합 혹은 통합하여 2년의 실무과정-2년의 심화과정-평생개발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구체적인 방안은, 산업대학이나 폴리텍을 포함해서 각 지역단위로 직업관련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갖추어오는 통합대학에 대해 MOU를 통해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방법임. 대학의 준비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노동부와 지경부가 국공립대의 운영을 위탁받아, 한기대와 산기대의 모델을 확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전망이 높은 서비스업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직업대학 모델을 만들

• 시뮬레이션 : 충남에 학문중심대학인 충남대학교와 직업중심대학인 충남신

(新)대학이 명실상부하게 경쟁하고, 취학연령의 학생들이 충남신(新)대학을 강력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마케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충남신(新)대학에 들어가서 마케팅에 필요한 실용중국어, 회계학, 의사소통능력개발, 취업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한 기술 등에 대해서 필요한 단계별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노인 요양 서비스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의 노인요양정책 수요에 정확하게 맞추어 설계된 커리큘럼을 수강하고 곧바로 관련자격증을 취득함. 관련학과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들이 수업을 진행하며, 주변에 있는 관련기업, 시설, 기관과 연계하여 실무수습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함
- 실무과정 80학점에 대한 수업료는 정부에서 전폭 지원하며, 실무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장에 취업하거나 혹은 심화과정에 들어감.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에서 심화과정에 들어가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훈련에 대한 지원의 형식으로 수업료를 지원함. 심화과정 80학점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함
- 심화과정 이후에는 개방교육과정이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개방교육과정을 듣는 경우, 직무훈련비 지원으로 수업료를 지원함. 실무과정, 심화과정, 개방교육과정에는 연한이 없으며, 평생에 걸쳐 들을 수 있음
- 충남신(新)대학은 한밭대학, 대전대학, 한국폴리텍 대전대학, 혜천대학, 대덕대학 등이 1대학 다수캠퍼스체제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각 캠퍼스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함
- 충남신(新)대학은 출범 시부터 지역의 기업들, 노조, 업종별 협회 등과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커리큘럼, 프로젝트 등을 공동운영하며, 이로써 대학의 직접고객인 직무훈련 수강자를 확보할 수 있고, 취학연령에 대한 취업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음

IV. 중소기업과 컨설팅

1.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현황

- 사업의 목적과 규모
 - 전문가의 진단·컨설팅을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 2011년도 215억 원의 예산으로 전문가 종합진단(2,500업체), 경영 및 기술컨설팅(1,000업체), 창업컨설팅(500업체) 등을 위해 총 사업비의 55% (창업컨설팅 65%)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함
- 컨설팅 지원 분야 및 내용
 - 업력(5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속성장컨설팅과 창업컨설팅으로 지원체계를 구분하여, 지속성장컨설팅(업력 5년 이상)은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중점 지원하고, 창업컨설팅(업력 5년 미만)은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공장설립대행 지원과 함께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타당성, R&D기획,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을 중심으로 지원함

- 과제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9〉 컨설팅사업 과제별 지원내역

기술과제	-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기술개발, 생산기술, 현장관리, 공정혁신, 원가개선 등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구조 고도화 지원
	- 사업전환 승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모델 기획, 신제품·신시장 개척, 신사업 공정개선, M&A추진 등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 사업전환 지원
	- 국내 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 지원
	- 대기업(모기업) 협력하에 공동으로 협력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기업(모기업)과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동반성장 지원
경영과제	- 재무전략, 노무·인사전략, 마케팅전략, 기업승계, 경영체계, 환경경영, 생산관리, 글로벌 경영전략 등
창업기술과제	- 생산성향상, R&D사업화, 공정관리, 사업전환, 재무전략, 노무·인사전략, 마케팅전략, 기업승계,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화 등
창업경영과제	- 생산성향상, R&D사업화, 공정관리, 사업전환, 재무전략, 노무·인사전략, 마케팅전략, 기업승계,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화 등
대행과제	- 창업절차 대행, 공장설립 대행, 사업타당성 검토

* 상기 열거과제 연계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중소기업 사업신청 → 사전진단·현장평가 → 혁신능력평가(신청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점검 → 완료보고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 기술 분야의 해외전문가 및 대중소 상생협력 컨설팅의 경우 신청·접수기간 외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월별 오프라인 접수 진행함
-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5회 이상 받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가점 사항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IP 컨설팅지원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장애인기업
- 기술분야에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제조업(C)에 해당하여야 함

2. 일본의 성공사례

- 일본은 미국·유럽에 비하면 컨설팅산업의 후발주자임.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일본 정부의 경영기술 공공 컨설팅 서비스는 APEC 회원국들 중 가장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음
- 일본 경영컨설팅 서비스의 강점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② 각 중소기업별 특정 요구사항에 맞춘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및 인큐베이터 매니저 파견 프로그램이 그것임
- 종합적으로 3단계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구성된 총 326곳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들은 전임 컨설턴트를 포함한 1000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막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벤처기업 지원 및 고난도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지원센터, 지역 중소기업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현 단위 중소기업 지원센터, 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센터, 이 3가지 유형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경영 컨설팅 제공에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별 경영 혁신 요구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담
 당할 수 있음. 이러한 포괄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일본 중소기업들에게 체
 계적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음

-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 정책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프
 로그램으로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적합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
 점을 가지고 있음
-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은 기업에 경영, 기술, 재무, 법무 전문가를 장기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기업별로 당면하고 있는 특정 경영 문제를
 공략할 수 있음.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상주하기 때문에 각 중소
 기업에 실질적이고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며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을 쉽게 이끌 수 있음. 파견된 전문가나 인큐베이터 매니저가 바
 꾸는 경우에도 신입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에 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됨

3. 중소기업 컨설팅의 확대방안

(1) 예산과 지원범위의 확대

- 중소기업 컨설팅은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임. 현재의 200억 정도의
 예산은 1업체당 5천만원씩 400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로서
 300만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함
- 컨설팅 내용을 잘 설계하고 대상을 확대한다면 현재의 10배 이상의 예산

을 배정해도 무방하다고 봄

- 지원범위를 사업비의 55%~65%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에게 35%~45%의
 자기부담을 매칭하도록 하고 있으나, 컨설팅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
 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자기 부담율이 지나치게 높
 아서 막상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려운 형편의 중소기업에게는 혜택
 이 가지 않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중간층 중심
 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자기 부담율을 전체적으로 낮추거나, 서비스
 의 종류나 중소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 부담율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컨설팅서비스의 확대

- 현재의 중소기업컨설팅은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민간컨설팅 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쿠폰제 방식임. 하지만 일
 방적으로 민간컨설팅 회사에 서비스제공을 의존하는 경우, 서비스가격의
 인상을 막기 어렵고, 서비스지원의 절차가 복잡해지며, 영세한 컨설팅회
 사의 난립으로 서비스의 질관리가 어렵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
 려우며, 결국 서비스의 확대에도 걸림돌이 됨
- 민간서비스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공공에서의
 직접컨설팅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전문
 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인큐베이터 매니저를 파견하는 등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서비스의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 사업처를 두고 컨설턴트들이 업체의 종합진
 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등 일부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는 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컨설팅 사업처를 직접 컨설팅서비스를 시행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거나,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지원을 위한 별도의 중소기업구조공단을 두는 방식에 의해 직접컨설팅 서비스 비중을 확대해야 함.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45개 지소에서 753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예를 참조할 수 있음

(3)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 이미 중소기업의 컨설팅수요는 기술과제와 경영과제, 창업과제 뿐만 아니라, 특허, 법률, 세무, 공정거래, R&D 기획, 공정혁신 등으로 그 분야가 확대되었음. 다양한 전문분야로 컨설팅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
- 직접컨설팅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서비스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상시화 되고 절차가 단순화되어야 함

V. 결론

-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함에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형식적 성과주의와 보신주의 때문임
- 1000억원의 예산을 5개의 대기업에게 지원하는 경우와 100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음. 이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5개의 대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신청서와 서류양식도 깔끔하게 잘 써오고, 실제로 성과가 있는 없든 성과보고서도 공무원의 의도에 맞게 잘 맞추어 오고, 사업 개수가 적으니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관리도 편하고, 관계를 잘 설정해놓으면 좋은 인맥이 될 뿐 아니라 퇴직 후 대기업에 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음
- 그에 비해서 100개의 중소기업과 사업을 하는 경우, 서류도 제대로 써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업 내의 전담인력이 없어서 연락도 어려운데다, 사업 개수가 많으니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관리도 번거롭고, 성과를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려운데다 성과가 안 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처리도 곤란함. 관계를 잘 설정해봐야 후에 민원사항만 늘어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처리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공무원 조직에서 모두가 대기업관련부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조직 내 평가가 뒤따르고 일에 대한 열정이나 집중도가 떨어짐
- 이러한 경향은 비단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 학계에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메카니즘임

보신주의와 잘못된 성과주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성과 평가틀을 바꾸며, 정책추진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나 쿼터제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함. 현재 중소기업 전용으로 책정된 R&D예산이 일종의 쿼터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R&D예산의 4% 정도에 불과함.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R&D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고 있는 일종의 적극적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구속력 결여로 인해 2005년 R&D예산의 12.4%를 정점으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2009년에는 9.7%까지 떨어졌음
- 구속력이 없는 KOSBIR제도보다는,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전체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명확한 쿼터제가 실효적임.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약 50% 정도이므로,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 약 14%(중소기업전용 4% + KOSBIR 10%)에서 해마다 10%씩 늘려서 4년 후 50%가 되도록 하되, 권고방식이 아닌 쿼터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실효성이 확보됨
- 형식적인 정량평가나 결과평가를 하기보다, 다수의 평가자를 두어 객관성을 확보한 후 정성평가를 늘리고, 단순한 결과평가보다는 예산투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대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중소기업정책에서는 무엇보다 혁신이 중요함. 혁신은 실패를 예정한 것이며, 중소기업정책에서 작은 성과 하나하나를 모두 얻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중소기업의 혁신을 추동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하는 경우 큰 성과를 얻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통해

서 발전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에서 미흡한 점이 혹 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짐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경제발전에 더 기여한다는 점이 정책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 정책추진 동력이 형성되어야 함
- 대기업은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단체를 통해서, 혹은 광고주로서 후원자로서 언론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함. 또한 자체 연구소 등을 통해서 관련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담당공무원에게 어필함
- 중소기업들은 진보개혁진영과 손을 잡고 진보개혁적인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정부를 설득하도록 힘을 합해야 함. 현재의 중소기업 사장들의 마인드는 매우 보수적임. 하지만 중소기업 사장들이 아무리 보수진영에서 영향력을 갖고자 해도 보수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쥌 수도 없고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예산구조를 바꾸어낼 수도 없음. 중소기업은 적어도 정부의 정책과 예산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목표 한도에서만이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힘을 모아야 함
- 이 중심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교육문제 해결’이라는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해야 함. 나아가 중소기업 사장들까지도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엮어내서 정책추진동력을 광범위하게 형성해야 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2010). 기업체노동비용실태조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1). 기술혁신조사.
- 교육과학기술부 등(2010).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 교육과학기술부(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2009).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 권명화 외. R&D 효율성 및 영향요인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김익성(200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역할과 중소기업 컨설팅 발전전략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찬준 외(2009). 지역산업 R&D 정책의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 김형기(2008).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넥스텔리전스(2011). 2011년도 주요국 R&D 예산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해주 외(201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분석.
- 박소희(2009). 주요국 R&D 기관평가제도 사례분석 및 시사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박진아(2011).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 KAIST 경영대학 온라인 지식서비스.
- 백철우(2010). 기업 R&D 투자확대와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산업연구원(2008).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부 R&D 지원효과 비교, 산업연구원.
- 안승구(2009).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엄미정(2008). 고등교육과 R&D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엄익천 외(2007).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엄익천(2010).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기금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유명희(2010).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 유종일 외(2006). 지식경제 패러다임과 성장정책, 시민경제사회연구소.
- 이길우 외(2010).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기술평가원.

이현숙 외(2010). 우리나라 R&D 투자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日本 經濟産業省 經濟産業政策局 調査統計部「工業統計表(産業編)」. 각년도.

장흥근(2005). 직업훈련의 전달과 소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부 각 부처(2010).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안).

정부-민간 합동작업단(2006). 비전2030.

정지선 외(2006). 산학클러스터의 HRD 기능 강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용현 외(2008). 중소기업 R&D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소기업연구원.

조용현(2006). 중소기업 R&D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2006). 해외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청(2008). 20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중소기업청(2010).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실적 및 계획.

중소기업청(2011). 2010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지식경제부(2009). 연구개발 시스템과 과제들.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6).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동향 조사 분석.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9). 대학부문 정부 R&D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0). 중소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홍지승(2008).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와 과제, 산업연구원.

홍지승(2010).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인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OECD(2009). *Employment Outlook*.

APEC(2007). 중소기업 혁신사례 브리핑, APEC SMEIC 제4호.

민주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안내

2011년 IDP 정책연구 시리즈

- 2011-01 시대정신을 담은 국가발전모델: 사회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동호**
- 2011-02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 및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 **박순성·김종욱**
- 2011-03 어떻게 '수도권정당'이 될 것인가: 2010년 영국 총선 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이진복**
- 2011-04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김동영**
- 2011-05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전략적 구상 **장환석**
- 2011-06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홍현익**
- 2011-07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문병주**
- 2011-08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영필**
- 2011-09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김은옥**
- 2011-10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영국**

- 2011-11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유종일**
- 2011-12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김용익**
-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박정식**
- 2011-14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 강령을 통해서 본 연속성과 변화 **문병주, 김은옥, 오상택**
- 2011-15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 체계 개선방안 연구: 4대강 사업을 사례로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영필·박정식**

IDP정책연구 네트워크 총서

- 2011-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
- 2011-2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 2011-3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연구
- 2011-4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
- 2011-5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람 과 정책 07

2011년 • 창간호 • 제 1호

목차 | CONTENTS |

권두언	4	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놓다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창간기념 인터뷰	8	2011년 민주당의 진로와 2012년 집권 플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연중특별기획 2012 민주진보, 승리연대의 길을 찾다	20	좌담 - 6.2 동시지방선거 민주진보연대의 성과와 과제 강기갑, 노회찬, 백승현, 정세균, 박순성
	48	연합정치의 필요성과 실현방도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60	연합정치: 주장과 쟁점 박일환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70	민주진보대통합당과 평화복지정권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 야권연대연합특위위원장)
긴급특별기고	79	지진,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사람 미조이 유타카 (오사카전기통신대학 기초이공학과 교수)
논단	100	언론편향과 민주주의의 위기: '조중동' 증편 허용과 정치학 정연우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15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전략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27	물가급등의 원인과 정책대응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특집 2011 한국사회 복지논쟁, 무엇을 할 것인가?

138	복지, 권리인가 시혜인가?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54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64	복지국가의 가치와 진정성 김동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78	왜 '민주당 보편적 복지 3+1' 인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와 사람들

192	법은 누구의 편인가? 육아휴직서와 사직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성들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200	웰빙 국가시대, 교육의 새판짜기 제2의 무상급식 운동을 찾아서 김명신 (민주당 서울시의원)
239	고령화 시대 젊게 사는 메시지 선진규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시대 공감 민주진보, 미래세대와 通하다.

208	방담 -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대학생위원회와의 만남
220	그들과 통하는 길 안수찬 (한겨레21 사회팀장)
232	청년에게 민주당을 보낸다 설인수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38	미래세대의 목소리 한가람, 소재현, 백윤정

시사칼럼

248	이랍세계의 민주화 운동과 중동 정치지형의 재편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
253	전세대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장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연구원 소식

259	창간 축하메세지
261	연구원 동정

사람 과 정책 07

2011년 • 여름호 • 제 2호

목차 | CONTENTS |

권두언	4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연중특별기획 2012 민주진보 승리의 길 2번째	10	특별기획여론조사: 통합인가? 연대인가? 이철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25	연합의 방식: 통합인가 연대인가 김만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38	연합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 전민용 (희망과대안 운영위원)
논단	54	권력기관 개혁의 핵 - 검찰개혁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0	뉴타운사업의 실패구조와 근본적 개편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92	한국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특집 6.2 지방선거 1년, 지방자치를 점검하다	112	르포: 민선5기 지방자치 1년, 현장을 가다 윤영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6	인터뷰: 김성환 노원구청장 - 공존의 시대를 향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끈다
	136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148	4대강사업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친 악영향과 위기해소방안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속기획 민주주의와 사람들	160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165	인터뷰: 시대정신과 민주당의 진로 임채정 (전국회의장)
	182	퇴행하는 민주주의, 추락하는 인권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190	한국의 민주주의자: 다산 정약용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9	세계 진보정치의 현장을 가다: 오슬로 진보 거버넌스 회의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대 공감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12	사회의 최약자로 이름 붙여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김향미·임아영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223	한국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다문화정책의 개선 방향 조화성 (공주대학교 강사)
	23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다 유승희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249	여성들의 목소리 이혜진 (대학생), 전해영 (워킹맘), 이부원 (전업주부)

시사칼럼 & 서평	258	검찰 개혁 유감 정성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264	시장에 종속된 국가 역할의 복원을 바란다 정경환 (민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69	진보개혁진영, 한반도 이슈를 준비할 때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274	[서평] 경제학을 리콜하라 (이정전/김영사)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소식	282	연구원 동정
	285	신착보고서 IDP정책연구
	287	독자 코너(창간호를 읽고)

사람 과 정책 07

2011년 • 가을호 • 제 3호

목차 | CONTENTS |

권두언	4	정치 위기와 인의(仁義)의 정치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연중특별기획 2012 민주진보 승리의 길 3번째	8	야3당 정책연구소장에게 듣는다: 2012 정책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23	6.2 지방선거의 경험에서 본 정책연합의 의의와 방향 한태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38	어떤 정책연합이어야 하는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논단	50	이명박·오세훈 시정의 평가와 새 시장의 리더십 조건 조명래 (단국대 교수)
	67	한국민주주의와 부마민주항쟁 이행봉 (부산대 교수)
	77	무상보육과 아동의 권리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103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재검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
특집 민생을 생각한다	116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28	한국의 노동구조와 비정규직 개혁과제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9	학생친화적 정부가 필요하다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
	159	가난한 집, 집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

연속기획 민주주의와 사람들

174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
182	민주당 원로 릴레이 인터뷰 선진규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196	열정과 헌신으로 2012 민주정부를 준비하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202	한국의 민주주의자 2 : 함석헌, 한국의 민주주의자 김성수 (『함석헌평전』 저자)

시대 공감 초고령 사회의 명암

212	특별기고 : 초고령 사회와 노인의 존엄 - 일본의 경험 이노우에 히데오 (일본 가나자와대 교수)
231	르포 : 빈곤과 고독사 그리고 독거노인 김혜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239	고령화 시대 젊게 사는 메시지 선진규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시사칼럼 & 서평

242	서울시 재정분석을 통해 본 복지정책의 가능성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247	SNS선거, 민주당의 선택은? 장덕진 (서울대 교수)
251	[서평]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정성표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57	[서평] 대한민국복지 김영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소식

264	연구원 동정
267	신착보고서
269	독자 코너(여름호를 읽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R&D, HRD, 컨설팅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1년 12월 20일

발행인 박순성 (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홈페이지 민주당 <http://www.minjoo.kr>

민주정책연구원 <http://www.idp.or.kr>

전화 02-2630-0114

팩스 02-2630-019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디자인 진애드 (02-2264-0608)
